WTO 제 10차 하이로비 각료회의의 전망과 DDA 운명

송 주 호(GS&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jhsong@gsnj.re.kr

1. WTO 각료회의의 의미와 경과
2. DDA 협상 논의동향
3. 최근의 협상여건 변화
4. DDA 농업협상 분야별 주요 쟁점
5. 나아로비 각료회의의 전망과 DDA 운명
WTO 제 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전망과 DDA 운영

1. WTO 각료회의의 의미와 경과

-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보통 2년 단위로 개최된다.

- 제 1차 각료회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의제(DDA)가 출범하였으며, 제 9차의 인도네시아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발리페키지가 타결되었다.

- 2015년 12월의 케냐 나이로비 제 10차 각료회의에서는 DDA협상의 부분적인 타결이 이루어졌고, 나이로비 이후의 DDA 진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회원국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동안의 WTO 각료회의의 경과

  1) 제 1차 각료회의 (1996, 싱가포르) : 다자규범제정이 필요한 분야 논의
     * 싱가포르 이슈 -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지원화, 투자촉진, 경쟁정책
  2) 제 2차 (1998, 제네바) : (세계경제 첨단시장) 금융서비스 협상 타결
  3) 제 3차 (1999, 시에틀) : 밀레니엄라운드 출범실패
  4) 제 4차 (2001, 도하) : DDA 협상 출범
  5) 제 5차 (2003, 킹고) : DDA 협상 결렬, 싱가포르 이슈 의제화 실패
  6) 제 6차 (2005, 홍콩) : 별 진전 없음, 수출보조 철회 합의
     * 2006년 6월~12월 협상중단,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타결될 뻔하다가 결렬

  7) 제 7차 (2009, 제네바) : WTO와 현재 세계 경제 환경 논의
  8) 제 8차 (2011, 제네바) : 일반이사회로 대체
  9) 제 9차 (2013, 발리) : DDA 발리 페키지 합의

* 무역지원화 협정, 농업분야(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재, 일반 서비스 내용추가, TRQ 관리방안, 수출경쟁, 문화, 최반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격, 무관세 시장접근 등) 등
2. DDA 협상 논의 동향

□ 2001년부터 시작된 DDA 협상은 2008년 7월 체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거의 탈락될 뻔 하다가 결렬되었다.

○ 농업분야에서는 2008년 12월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계속 협상은 진행되어 왔으나 거의 진전이 없었다.

○ 2013년 12월 제 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부분적인 조기수확을 거두어서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데 성공하였다 (발리페키지)

□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2014년말까지 DDA 작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4년 협상은 계획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 11월에 미국과 인도 간 합의로 무역원활화 의정서를 체택하였다.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체에 대한 영구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평화조항을 지속 적용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까지 영구해법을 위한 협상을 촉진토록 하였다.

○ 2015년 7월까지 Post-Bali 작업계획을 체택키로 연기하였다.

□ 2015년 협상은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 1월의 다보스 포럼에서의 통상장관회의에서 실태가능성(doability)을 고려하여 DDA 작업계획의 목표수준 조정(recalibration)에 공감대를 이어주었다.

○ DDA 협상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며, 농업분야에서도 시장접근, 국내 보조, 수출경쟁 각 분야별로 많은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주제별로 핵심국가들간에 협상이 진행되었다.

○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복잡한 구도 대신에 평균관세 감축법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4차 수정안에서는 구간별 판세감축폭 차등적용,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설정 등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고 신축적인
적용이 가능한 평균감축방식을 적용하는다는 의견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UR 에서도 선진국은 관세를 평균 36% 감축(최소 15%), 개도국은 평균 24% (최소 10%) 감축한 바 있다.

○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모델러터 4차 수정안의 적용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한 발자국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선진국들은 UR 당시에 AMS한도를 인정받았지만 대다수 개도국들은 AMS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운용상 개도국이 원칙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선진국들은 DDA 4차 모델러터 수정안은 개도국을 너무 우대하여 중국, 인도 등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감축의무가 없고 선진국만 감축부담이 크므로 중국, 인도 등도 보조금 감축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수출경쟁 분야에서도 모델러터 4차 수정안에 규정된 수출보조의 철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하지만 수출신생, 수출 국영무역 기업, 식량원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존재한다.

○ 식량안보 목적이 공공비용제에 대한 영구법안 마련을 위한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별 전전이 없이 미국과 인도간에 협력기반만 계속되고 있다.

□ 2015년 12월 나이로비 10차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의 각 분야별로 쟁점이 너무 많고 이견조정이 쉽지 않아 시간제약으로 DDA 협상을 완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발리 각료회의에서처럼 소규모 폐기만이라도 타결하자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나이로비 이후의 DDA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 미국은 일부 쟁점이 적은 분야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 대우, 투명성 강화 등)만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타결하고, DDA 협상은 종료하자는 의견이다.

○ EU는 미국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소규모 폐기지가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출보조 이외에도 수출신생,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 등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속적이다.

○ 반면 개도국들은 DDA 협상을 계속하여야 하며 DDA 협상이 갈등을 주제로
4 격동하는 세계 통상 질서와 한국 농업의 길

출발한 만큼, 개도국들을 위한 확실한 특별대우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최근의 협상 여건 변화

1) 지역무역협정(RTA)이 급속히 평창되고 있어 다자간협상(DDA)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


그림 1. 지역무역협정의 연도별 WTO 통보 내역

○ WTO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타결하면 WTO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늦게 통보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FTA가 타결되었거나 발효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WTO 사무국은 중국-ASEAN 서비스협정, 스위스-중국, 홍콩-중국-칠레, 미국-콜롬비아 간의 FTA협정에 대해 조속한 통보를 요청중이다.

○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MEGA FTA가 유행하고 있다.
-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는 최근 타결이 선언되었고 ASEAN 10 개국과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고 있는 RCEP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미국과 EU와의 TTIP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도 진행중이다.

2) 2001년 이후 신청과도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농업보조금 급증

○ DDA 협상이 출범한 이후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개도국 특별우대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선진국들이 많은 우려 를 하고 있다.

- 주요국의 명목 GDP 변화 (10억 US$)

* 미국 : (2000) 10,285 → (2014) 17,419 (69.4% 성장)
* 중국 : (2000) 1,205 → (2014) 10,360 (760% 성장)
* 일본 : (2000) 4,731 → (2014) 4,601 (3% 감소)
* 인도 : (2000) 477 → (2014) 2,067 (333% 성장)

그림 2. 주요국의 연도별 명목 GDP 비교

![GDP Graph](image)

자료 : World Bank, 2015

○ 한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대하면서 가격지지정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 OECD 회원국과 신청과도국 7개국의 연도별 PSE (생산자지지추정치, "농업·농촌의 길 2015 조직위원회"
6 격동하는 세계 통상 질서와 한국 농업의 길

Producer Support Estimate) 금액 변화를 보면 1995년에는 신홍 7개국의 PSE 비중이 전체 PSE의 4%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그림 3. OECD 회원국과 신홍 7개국의 연도별 PSE 금액변화

3)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 추세

○ DDA가 출범한 2001년에 비해 2013/4년 국제식량가격은 2배이상을 상승하였 다.

- 이로 인해 판세감축의 시장접근 개선 효과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Rev 4의 개 도국 S&I 적용시 개도국 시장접근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목표가격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AMS는 감소하고 있고, 가격지지를 하는 개 도국들의 시장가격지지(MPS)는 증가하고 있다.

표 1.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변화(명목, $/MT)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옥수수</th>
<th>쌀(Thai, 5%)</th>
<th>밀(U.S. HRW)</th>
</tr>
</thead>
<tbody>
<tr>
<td>'86~'88평균</td>
<td>90.05</td>
<td>226.11</td>
<td>124.34</td>
</tr>
<tr>
<td>'00~'02평균</td>
<td>92.48</td>
<td>189.04</td>
<td>129.66</td>
</tr>
<tr>
<td>'06~'08평균</td>
<td>169.54</td>
<td>427.17</td>
<td>257.76</td>
</tr>
<tr>
<td>'11~'13평균</td>
<td>283.16</td>
<td>537.30</td>
<td>313.92</td>
</tr>
</tbody>
</table>

자료: World Bank, 2014
따라서 시장접근에 대한 관심은 줄고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더 침해하게 대립되게 되었다. 또한 시장접근은 FTA로 부분적인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DDA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4) 식량안보 불안 및 가격변동성 확대

기후변화의 영향, 2007/8년도의 국제 곡물가격 폭등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많은 개도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자급자족제로 중요정책목표로 책칭하고 있다.
- 식량안보를 위해 가격지지를 통한 공공비축제 (관리가격으로 구매 후 관리가격으로 방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를 하용보조로 인정받으려는 개도국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정부의 수매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 중국의 쌀과 밀의 연도별 최저 수매가격 변화 (2007~2014, 2007=100)

자료: OECD (2015)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제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 위험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등 생산 및 무역에 대한 정책효과가 낮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격동하는 세계 통상 질서와 한국 농업의 길

WTO에서 시장가격지지 정책은 무역제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4. DDA 협상 분야별 주요 쟁점

1) 시장접근분야 쟁점과 대응방안

☐ 4차 수정안의 시장접근분야 협상구조를 바꾸려는 서도가 진행 중이다.

☐ 4차 수정안은 구간별 관세 감축, 민감품목의 인정,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의
허용과 SSM 신설 등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 2015년 들어와 4차 수정안의 구간별 관세감축 방식을 대신하여 평균 및 최소
감축률 방식에 의한 관세감축을 주장한 파라과이 제안서가 논의되고 있다.

☐ 4차 수정안에서 너무 많은 신축성이 부여되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접근 개선
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불만과 함께 EU를 중심으로 단순화된 접근법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미국 등이 동조하고 있다.

☐ 파라과이의 제안서의 주요 내용

☐ 관세감축률: 평균 54%(개도국 36%), 최소감축률 20%(개도국 15%)

☐ 민감품목: 전체 세 번의 5% 범위(개도국은 12%)내에서는 최소감축률 10%

☐ 관세상한: 100%(개도국은 150%), 단, TRQ 중량(5%)이 예외인정

☐ 각국이 공식에 맞춰 기초제안을 한 후 이해관계국간 양자협의를 통해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R/O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노르웨이의 수정 제안

☐ 파라과이의 제안의 최소감축률 인하, RAM 우대 강화, 개도국 관세감축면제
(관세산의 5%)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4.15)

☐ 평균 감축률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는 호응을 얻고 있으
며, 평균감축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부별 감축률의 평균(average of cut)과 전체 평균 관세율의 감축(cut of average) 구별하고 있다.

아래 표의 경우 세부별 감축률을 평균할 경우 평균 감축률이 36%이나, 전체 관세율의 감축률은 47.6% 로 달라진다.

표 2. 관세감축 방식별 평균 감축률의 차이

<table>
<thead>
<tr>
<th>세부</th>
<th>현행관세 (%)</th>
<th>고관세 대폭 감축 시</th>
<th>감축률 (%)</th>
<th>감축 후 관세(%)</th>
</tr>
</thead>
<tbody>
<tr>
<td>A</td>
<td>500</td>
<td>55</td>
<td>225</td>
<td></td>
</tr>
<tr>
<td>B</td>
<td>300</td>
<td>45</td>
<td>165</td>
<td></td>
</tr>
<tr>
<td>C</td>
<td>100</td>
<td>35</td>
<td>65</td>
<td></td>
</tr>
<tr>
<td>D</td>
<td>50</td>
<td>25</td>
<td>37.5</td>
<td></td>
</tr>
<tr>
<td>E</td>
<td>20</td>
<td>20</td>
<td>16</td>
<td></td>
</tr>
<tr>
<td>평균</td>
<td>194</td>
<td>(36)</td>
<td>101.7</td>
<td></td>
</tr>
</tbody>
</table>

UR 당시에는 세부별 감축률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4차 수정안에서도 세부별 감축률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세부별 감축률의 평균 개념을 사용하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할 필요성은 적어지며, 전체 평균 관세율의 감축(cut of average)방식을 사용하려면 종량세는 반드시 종가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쌀 관세상당치 산정시에도 유사한 2가지 방식이 검토된 바 있다.

세부별 감축의 평균방식에도 3가지 감축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1) 고관세를 대폭 감축하게 되면 평균 관세의 감축률은 높일 수 있으나 고관세 품목의 경우 상당부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어렵다.

2) 저관세 품목의 감축률을 높이는 경우 고관세 품목의 관세를 상대적으로 높이 유지하면서 보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균 관세율의 감축은 낮아진다.

3)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감축률을 적용하게 되면 평균 관세율의 감축은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평균 감축률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판세 상관에 대해서도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G33은 파라파이 제한에서 SP, SSM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에의 영향

○ 4차 수정안에서는 특별품목이 있어서 전체 세번의 5%까지는 판세감축을 안해도 되고, 판세상한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파라파이 제한은 우리로서는 4차 수정안보다 불리한 제안이다.

- 하지만 파라파이 제한도 민감품목 (전체 세번의 12%)은 최소 감축률을 10% 만 적용하므로 우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판세상한이 150%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TRQ를 증량해야 한다면 쌀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50% 이상 고판세 품목 세번 132개 중에서, 27개 세번을 제외한 105개 세번은 고판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고판세보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반별 감축의 평균 방식이 유리하다.

2) 국내보조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 4차수정안에서는 특히 선진국의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 무역재고보조금액 OTIDS (= AMS + de-minimis + Blue Box)를 신설하였고, 이행기간동안 선진국은 55%~80%, 개도국은 36.7%를 감축해야 한다.

* OTIDS = UR 최종 양허 AMS + UR 이행기간(선진국 1995~2000, 개도국 1995~2004) 평균 농업생산액의 10% (개도국은 20%) + UR 이행기간 블루박스 통보액 평균 혹은 같은 기간 농업생산액의 5% 중 높은 것

○ AMS도 선진국은 45%~70%, 개도국은 30%를 감축해야 한다.

○ Blue Box에도 총액 및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고,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new Blue Box를 신설하였다.
○ de-minimis (최소허용보조)도 선진국은 농업생산액의 5%에서 2.5%로 개도국은 10%에서 6.7%로 감축한다.

○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어서 AMS 없는 개도국은 OTDS 감축과 de-minimis 감축을 면제하였다. 또한 Development Box (투자 및 투입재 보조)에 대해서는 연급이 없어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다. 또한 RAM은 de-minimis 한도 내에서는 OTDS 제약 없다 (중국).

- 인도는 2010-11년도에 Development Box로 316억$ (투입재보조 290.6억, 투자 보조 25.3억)을 통보하였는데 이는 인도 농업생산액의 10% 정도이다.

- 단, 중국은 Development Box를 사용할 수 없다 (WTO 가입협상 시 조건).

- 주요국들의 보조금 운용 내역을 보면 선진국은 감축대상보조가 감소하고 개도국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EU와 일본의 OTDS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의 OTDS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OTDS의 경우 미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이 감축 후 OTDS의 70% 이상을 현재 활용 중이며 미국과 노르웨이는 OTDS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주요국의 무역 왜곡 보조 총액 (OTDS)
대부분 나라의 현행 AMIS는 한도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다 (최근 통보기준)
- 스위스 52%, 미국 36%, 캐나다 19%, 일본 15%, EU 10%, 한국 0% 등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기준연도</th>
<th>OTDS 기준</th>
<th>OTDS 감축 후</th>
<th>OTDS 현행</th>
<th>농업 총생산액</th>
<th>AMS UR 양허</th>
<th>AMS 현행</th>
<th>de-minimis 품목 특별</th>
<th>de-minimis 품목 불특별</th>
<th>Blue Box</th>
<th>Green Box</th>
<th>Development Box</th>
</tr>
</thead>
<tbody>
<tr>
<td>브라질</td>
<td>12/13</td>
<td>13,900</td>
<td>8,800</td>
<td>2,430</td>
<td>198,000</td>
<td>912</td>
<td>0</td>
<td>321</td>
<td>2,110</td>
<td>0</td>
<td>6,199</td>
<td>1,070</td>
</tr>
<tr>
<td>캐나다</td>
<td>2012</td>
<td>8,808</td>
<td>3,963</td>
<td>2,966</td>
<td>54,434</td>
<td>4,271</td>
<td>831</td>
<td>130</td>
<td>2,005</td>
<td>0</td>
<td>2,636</td>
<td>0</td>
</tr>
<tr>
<td>중국</td>
<td>2010</td>
<td>82,785</td>
<td>82,785</td>
<td>17,956</td>
<td>928,904</td>
<td>-</td>
<td>0</td>
<td>3,532</td>
<td>14,424</td>
<td>0</td>
<td>78,957</td>
<td>0</td>
</tr>
<tr>
<td>EU</td>
<td>11/12</td>
<td>167,264</td>
<td>33,508</td>
<td>15,013</td>
<td>513,251</td>
<td>100,032</td>
<td>9,497</td>
<td>432</td>
<td>957</td>
<td>4,128</td>
<td>98,277</td>
<td>0</td>
</tr>
<tr>
<td>인도</td>
<td>10/11</td>
<td>25,263</td>
<td>25,263</td>
<td>2,117</td>
<td>318,942</td>
<td>-</td>
<td>0</td>
<td>2,117</td>
<td>0</td>
<td>0</td>
<td>24,520</td>
<td>31,610</td>
</tr>
<tr>
<td>일본</td>
<td>2012</td>
<td>65,086</td>
<td>16,274</td>
<td>11,681</td>
<td>103,490</td>
<td>47,160</td>
<td>7,228</td>
<td>259</td>
<td>2,352</td>
<td>1,842</td>
<td>22,280</td>
<td>0</td>
</tr>
<tr>
<td>한국</td>
<td>2011</td>
<td>8,705</td>
<td>5,512</td>
<td>976</td>
<td>39,323</td>
<td>1,356</td>
<td>0</td>
<td>716</td>
<td>261</td>
<td>0</td>
<td>7,029</td>
<td>1</td>
</tr>
<tr>
<td>스위스</td>
<td>2012</td>
<td>6,020</td>
<td>2,709</td>
<td>2,230</td>
<td>(10,481)</td>
<td>4,292</td>
<td>2,230</td>
<td>0</td>
<td>0</td>
<td>0</td>
<td>3,865</td>
<td>0</td>
</tr>
<tr>
<td>미국</td>
<td>2012</td>
<td>48,500</td>
<td>14,500</td>
<td>12,135</td>
<td>396,606</td>
<td>19,103</td>
<td>6,863</td>
<td>4,963</td>
<td>309</td>
<td>0</td>
<td>127,441</td>
<td>0</td>
</tr>
</tbody>
</table>

비고: 각국 화폐 표시 국내보조금 해당 연도 국가별 환율을 이용하여 지자각 변환. 
자료: Brink(2014 a, b). 일부는 저자 직접 계산, 중국자료는 2015년 5월에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로 업데이트 함. 스위스는 품목 불특별보조가 없으며 따라서 농업생산액 통보하지 않고 있음. ( ) 안의 숫자는 2008년 자료, WTO
UR 당시 AMS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많은 개도국들의 경우 감축대상보조는 de-minims 한도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식량안보 목적으로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는 공공비용제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보조한도 초과여부가 생점이 되고 있다.

- 개도국 중에서 AMS가 있는 나라는 한국,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이고, 없는 나라는 인도, 중국, 터키, 필리핀, 덴마크 등이다.

- 관리가격으로 공공비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지지가 되어 당년도 AMS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가격지미은 당년도 가격을 쓰는 참조가격은 1986-88 평균 국가가격을 써야 하고, 또한 인플레이션, 환율 변화, 실제 수매량 등 계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MPS(당년도) = (국내가격지미(당년도) - 고정국가가격) * eligible production(당년도)

- 결국, 인도의 경우 항구해협을 쓰지 못할 때까지 국내보조 약속 외반에 대한 제소를 자제하기로 합의가 되었지만 항구해협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거의 진전이 없다.

- 미국은 그 동안의 정책결의를 분석하여 best practice(모범사례)를 모사하자는 입장이며, 인도는 그 동안 제기된 대안(인플레이션, 현실 국가가격 사용)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입장이다.

- 주요국들의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의견조율이 어렵다.

- 모델러티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해야 하지만, 일부 신호개도국들은 감축부담이 거의 없어 이들 나라들도 공정하게 부담을 저여야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은 무역비중, 보조금 감행 변화 등 최근의 변화가 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인도, 중국 등 국내 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도의 경우 AMS가 없어 de-minimis 감축이 없으며 Development Box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Development Box도 OIDS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지만 인도는 반대한다.
- 중국의 경우 RAM 으로서 OTDS 한도에 상관없이 de-minimis 범위 내에서
  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RAM을 가입기간에 따라 재분류하는 입장인데, 중
  국은 WTO 가입협상시 de-minimis 한도가 농업생산액의 8.5%에 불과하고
  Development Box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OTDS 감축요구에 반대한
  다.

○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개도국 우대 내용이 유지
  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부담은 절 수 없다는 입장이다.

- UR 당시 모든 선진국들은 AMS를 de-minimis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AMS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불평등이 이
  번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특히, 개도국들은 최근 시장가격저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보조 한도초과
  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지만 제소 자체에 대한 이익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

○ 우리나라는 AMS가 있는 개도국이므로 4차 수정안에 따를 경우 보조금 수
  가 감축의무가 생기고, 특히 싼소득보전적분제를 AMS한도내에서 운영해
  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국내보조 감축의무가 없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 특히 향후 싼 값 하락이 예상되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
  는 상황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감축의무 철회는 정책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3) 수출경쟁 관련 정책과 대응방안

○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합의되었다.

○ 2013년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고, 병렬적인 방법으로 수출보조
  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수출관련 조치(수출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
  조)에 대한 규율제정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개도국에 허용된 유통비용보조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된 후 5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8년의 4차 수정안에서는 수출보조의 철폐, 수출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 수출보조는 철폐되며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철폐하고, 개도국에 허용된 유통비용 보조 (9조 4항)는 2021년까지는 존속할 수 있다.
○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부속서에 상세히 규정하였다.
    - 수출신용은 최대상환액, 선진국은 이행개시일부터, 개도국은 4년간 점진적으로 180일로 하고, 또한 금융상 특례가 없도록 하였다 (self-financing).
    - 수출국영무역기업은 마케팅보도를 포함하여 수출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기구를 의미하며 2013년까지 수출 독점적 권한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 식량원조에 대해서도 상업적 수출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식량원조의 제공이 다른 수출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아야 하고,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완전무상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 규정에 비상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식량원조 제공에 대한 상세한 규율을 담고 있다.

□ 2013년의 발리가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에 대한 각료 선언이 있었다.

○ 2005년 홍콩 각료 선언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4차 수정안이 수출경쟁에서의 수준 높은 최종 합의를 위한 중요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수출보조를 철폐하고,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수출관련 조치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규율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보장하기로 선언을 하였다.
○ 또한 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수출경쟁분야는 시장접근이나 국내보조분야보다는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는 애자서 나이로비 폐기지에 포함될 내용으로 우선시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아직 불투명하다.

○ 미국은 수출보조 철폐하자는 입장인 반면, EU 등은 수출경쟁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수출보조 철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허용된 유통비용보조에 대해서도 철폐시한을 5년간 연장해 줄 필요 없이 동시에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개도국들은 유통비용보조에 대해 철폐시한을 연장해 주는 특별대우가 홍콩각료선언임을 상기시키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수출신용의 경우 미국은 GSM 102의 최대상황기간이 2년 (브라질 변화 소송에서는 18개월로 축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성의 인정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수출국영무역은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대부분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식량원조의 경우 미국의 비중이 위작 크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미국은 현금화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등 4차 수정안의 규율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결국, 수출경쟁분야도 제재이 적은 수출보조 철폐시점만 나이로비 페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도국들은 수출보조를 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특별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조가 철폐되더라도 유통비용에 대한 보조연장 혜택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전망과 향후 DDA의 운명

○ 2013년의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발리 페키지가 타결되고 그 외의 전존 DDA 쟁점은 후속협상을 통해 타결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그 이후 협상을 계속하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페키지가 어떤 규모로 결정될지, 향후 DDA 협상이 지속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논의 진행상황에 달려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리오가 가능하다.

(1) 소규모 페키지 합의 + DDA 협상 종료
(2) 소규모 페키지 합의 + DDA 협상 계속
(3) 중규모 페키지 합의 + DDA 협상 종료
(4) 중규모 페키지 합의 + DDA 협상 계속

□ 10월 8일의 일반이사회 회의에서도 여전히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미국, EU 일본, 노르웨이는 그동안의 점진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의 생김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나이로비 이후 DDA는 종료를 해야 하며, 만일 앞으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면 DDA 체계 밖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나이로비 이후에도 잔존 분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야 하고, 또한 도하각료선언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협상의 불가 분의 요소(integral element)라고 선언한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0월 9일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캐나다, 콜롬비아 출신의 3명의 facilitator를 지명하여 각자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나이로비 결과문서의 구조
2) 문서에 포함될 내용 (나이로비 이후작업에 대한 우선 순위 포함)
3) 결과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 만일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면 DDA 협상은 종료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일부 국가라도 협상 종료를 반대할 경우에는 종료선언은 못하겠으며, 협상이 중단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협상체계는 쉽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만일 협상이 중단되는 경우 사정접근분야와 수출경쟁분야는 별 문제 없지만 국내보조분야는 개도국들의 보조가 중증하는데 대한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시장접근분야는 UR 판세감축 이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유지되면 되므로 선진
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로 도입
하려 했던 SSM이 무산되면 어려움이 난다.

- G33은 SSM을 시장접근분야가 아닌 무역구제 수단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용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국내보조분야는 협상중단이 선진국들의 감축부담만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크고 개도국들은 별로 얻는게 없어 개도국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많은 개도국들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시장가격지지에 대한 AMS 계산문제가
 계속 쟁점화할 우려가 있다.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대해 항구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제소를 자제
 하기로 하였지만 항구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서 인도 등이 불편한 상황이다.

□ DDA의 운행에 대한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결과와 별개로 WTO는 일반적
인 역할인 다자간 규범에 대한 분쟁해결,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등은 계속
수행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새로운 다자간 규범이 필요한 관자상거래, 정보
통신 협정, 투자 등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등 일정 역할은 계속
수행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 무역확대에 의한 성장이 필요하
므로 DDA 협상이 타결되어 무역에 대한 국제 규범이 정비되는 것이 바람
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농업분야는 DDA 협상이 중도에 종료되는 것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이나 보조금 감축부담이 없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